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북핵 논의 27년과 5차 핵실험

# 목 차

## ■ 북핵 논의 27년과 5차 핵실험

Executive Summary .....	i
1. 북핵 논의 27년 .....	1
2. 각 주기별 주요 내용 .....	2
3. 5차 핵실험의 내용과 특징 .....	5
4.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미·중의 역할 .....	6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북핵 논의 27년과 5차 핵실험

####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북핵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난 27년간의 남북대화과 북미협상, 6자회담은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5차 핵실험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의 對北 정책 향방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 북한의 5차 핵실험의 내용과 특징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있었던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단행되었으며,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 수준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급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하여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대내적으로는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체제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향후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등이 강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미·중의 역할

북한 핵실험 이후 UN 차원에서는 수차례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對北 제재를 실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UN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對北 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민생항목) 삭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 핵심이지만,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안보리 결의 채택 소요 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결의 후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체제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하에 對北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며, 북핵문제 협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對北 제재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미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對北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북핵문제의 ‘비군사적 해결’을 전제로 하나,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한미일 3자 공조 하에 중국을 이용한 對北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압박(‘전략적 인내’)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대화는 하겠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 직접 타격도 고려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미국의 對北 강경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1. 북핵 논의 27년

○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7년간의 남북대화, 북미협상, 6자회담은 합의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음

-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는 2006년 1차 핵실험을 계기로 3번째 단계에 진입

### ① Phase I (1989~1992년)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

- 북핵 도발(1989년) : 북한 영변에서 대규모 핵 시설 단지 발견
- 양자 합의(1991년) : 남북 간 핵협상 결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
- 북한의 합의 불이행(1992년) : 북한의 남북 상호핵 사찰 거부로 공동선언 무효화

### ② Phase II (1993~2005년) : 북한 NPT<sup>1)</sup> 탈퇴

- 북핵 도발(1993년) : 북한은 NPT를 탈퇴하여 핵위기 고조
- 양자 합의(1994년) :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도출
- 북한의 합의 불이행(2002년) : 북한의 농축핵 개발 의혹 및 2003년 NPT 재탈퇴

### ③ Phase III(2006년~현재) : 북한 1~5차 핵실험 강행

- 북핵 도발(2006년) : 북한 1차 핵실험 실시
- 다자 합의(2007년) : 6자회담을 통해 2.13 및 10.3 합의 도출
- 북한의 합의 불이행(2009년)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합의 해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1) NPT는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말하며,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를 선언, 이후 북미 제네바합의 등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가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한 상태.

## 2. 각 주기별 주요 내용

### ① Phase I (1989~1992년)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

- 배경 : 1989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 증폭
  -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와 동시에 핵 개발에 착수, 1974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동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가입
  - 1984년 초 영변 5MWe<sup>2)</sup> 원자로가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된 것을 계기로, 1985년 소련과 북한 간 '원전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및 NPT 가입
  -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의 영변 핵시설 사진 공개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증폭
  
- 합의 :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핵협상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
  - 동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sup>3)</sup> 중단 발표
  - 북한은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
  
- 합의 불이행 : 북한의 남북 상호 핵 사찰 거부로 남북 간 합의 무효화
  - IAEA는 북한에 대한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 1993년 2월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채택
  - 이에 대해 북한은 IAEA 이사회의 불공정한 결의를 비난하면서 핵 사찰을 거부

####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년)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과정	- 1991년 12월 26일~31일까지 3차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된 핵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12월 31일)
주요 내용	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②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 핵재처리시설 및 우리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⑤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MWe 는 전기 생산량을 말하는 것으로, Mega Watt electric의 줄임말임.

3) 1993년 재개, 1994~2007년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KR: Key Resolve)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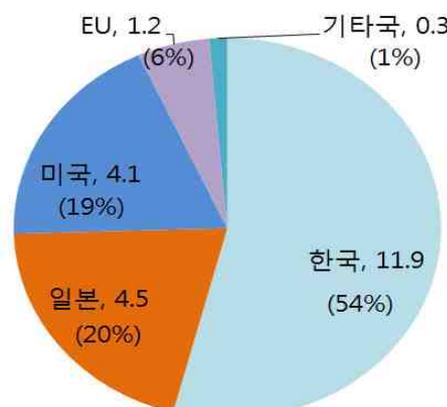
② Phase II(1993~2003년) : 북한 NPT 탈퇴

- 배경 :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성명
  - 1993년 5월 북한 NPT 탈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825호) 채택4)
- 합의 : 북미 간 핵 협상을 통해 1994년 「기본합의문」(북미 제네바 합의) 도출
  - 북미 간 1단계(1993년 6월 2일~11일), 2단계(1993년 7월 14일~19일), 3단계(1994년 7월 20일~10월 17일) 고위급 회담을 거치면서 제네바 합의 도출
  - 미국은 對북 중유공급을 시작(1995년 1월)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1995년 12월)되어 공사 착수
- 합의 해체 : 2003년 1월 북한의 NPT 재탈퇴 선언
  - 2002년 1월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언급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국정연설로 북미 관계 악화
  -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시인함에 따라, 동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부터 對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 2002년 12월 북한은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공표함과 동시에, 핵동결 해제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IAEA 사찰관을 추방
  - 2003년 1월 북한은 NPT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2월 5MWe 원자로를 재가동

< 제네바 합의(1994년)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 미국은 이를 대가로 1,000MWe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 중유 공급을 주선 ① IAEA의 모든 사찰(특별사찰 포함) 수락 ② 북·미 관계 정상화 협의 ③ 남북대화 재개 ④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등

< KEDO 경수로사업 자원 분담률(1995~2006년) >  
(단위 : 억 달러)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자료 : 통일부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4) ① 북한의 NPT 탈퇴선언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요청, ②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요청, ③ IAEA 사무총장의 對북한 협의 및 결과 안보리 보고 요청, ④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포함, 관련국들에 대해 문제 해결 촉진 권유, ⑤ 안보리는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 등이 주요 내용임.

③ Phase III(2006년~현재) : 북한 1~5차 핵실험 강행

- 배경 :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 2003년 4월 북·미·중 3자 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sup>5)</sup> 필요성 대두
  -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5년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북핵 논의 진전
  - 2005년 BDA 문제 대두 이후 북한은 6자회담 거부 및 2006년 10월 핵실험 강행
- 합의 : 2.13·10.3 합의(2007년) 도출 및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2008년)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13 합의(2007년) 및 구체적 2단계 이행 합의 문서인 10.3 합의(2007) 채택
  - 특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2008년)
- 합의 해체 : 북한은 2차(2009년), 3차(2013년), 4·5차(2016년) 핵실험 강행
  - 2009년 5월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의 2차 핵실험 강행
  - 2013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방식의 3차 핵실험 실시
  - 2016년 1월과 9월 북한은 수소탄(증폭핵분열탄) 방식의 4·5차 핵실험 실시<sup>6)</sup>

※ Banco Delta Asia(BDA) 금융조치

- 美 재무부는 2005.9.15 BDA가 마카오에서 불법 금융활동에 관여한 북한 당국의 자발적 창구 역할을 하였다며, BDA를 '돈 세탁 주요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
-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따라 불법자금 세탁 및 여타 금융범죄 혐의 적용
- 해당 외국금융기관의 미국 금융기관 내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또는 환계좌 (payable-through account) 개설 또는 유지 금지
- 이에 따라 BDA의 예금이 대량으로 유출되자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 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모든 계좌(총 50여개, 약 2,500만 달러) 동결

< 9.19 공동성명(2005년)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목표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실현
북한	-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 조치 복귀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미국	- 한반도 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관계정상화 조치 약속
일본	- 관계정상화 조치 약속
6자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재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증진 약속 · 對북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한국은 200만 KW 전력 공급 제안 재확인)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약속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 추진

자료 : 외교부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5)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임.

6) 북한은 4차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나, 수소폭탄의 폭발력을 고려하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활용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음.

### 3. 5차 핵실험의 내용과 특징

- 이번 실험은 북한 핵고도화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향후 대외정책에 핵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
  - 강도와 방식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단행되었으며, 강도는 역대 최대급으로 전해짐
    - 이번 핵실험 위력은 4차 핵실험의 2배인 10~20kt(히로시마 원폭 15kt 수준)으로 추정, 수소탄의 폭발력(100kt)에는 미치지 못해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
    - 북한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에 성공하여 소형화·다중화·경량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
  - 북한의 의도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제재 무용론 확산 의도,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일을 맞아 체제 결속력 강화 의도
    - (대외) 안보리는 지난 3월 對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언론 성명기도 올해에만 9차례 채택했으나 제재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대내) 정권수립일(9.9) 68주년 기념을 비롯해 다가올 노동당 창건 71주년(10.10)을 앞두고 체제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핵 실험을 실시
  - 추가 도발 가능성 :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등 도발 우려
    -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14차례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한 바, 향후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 강행 우려 존재

< 북한의 핵실험 추이 >

구분	1차 (2006. 10. 9)	2차 (2009. 5. 25)	3차 (2013. 2. 12)	4차 (2016. 1. 6)	5차 (2016. 9. 9)
실험 일자의 배경	북한 노동당창건일 ('45. 10. 10)	美 메모리얼 데이(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 ('42. 2. 16)	김정은 위원장 생일 ('84. 1. 8)	북한 정권수립일 ('48. 9. 9)
지진 규모	3.9	4.5	4.9	4.8	5.0
핵실험 위력	1kt	3~4kt	6~7kt	6kt	10~20kt
원료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추정	北 수소탄 주장 (증폭핵분열탄 추정)	
대북 제재	UN 안보리 결의 1718호 (2006. 10. 15)	UN 안보리 결의 1874호 (2009. 6. 13)	UN 안보리 결의 2094호 (2013. 3. 7)	UN 안보리 결의 2270호 (2016. 3. 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예상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7) 안보리의 의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 결의(resolution) 순임.

#### 4.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미·중의 역할

##### ① 국제사회의 대응과 효과 전망

○ 예외조항 삭제 등을 통한 현재의 對북 제재조치 강화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

- 예상 대응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보다 엄격한 추가 對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역시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
  - UN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 중
  - 다만, 중국은 과거와 같이 추가 제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안보리 결의 : 중국의 소극적 반응과 차별화된 추가제재안 마련이 쉽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민생목적) 삭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 등이 핵심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소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제재 효과 :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은 유엔의 새로운 對북 제재안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김정은 체제를 흔들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 북한 핵실험 이후 UN 제재 추이 >

구분	결의 채택 소요 시간	주요 내용
1차 핵실험 (2006.10. 9)	5일 (안보리결의 1718호)	- 무기, 사치품 등 금수조치(embargo)
2차 핵실험 (2009. 9. 25)	18일 (안보리결의 1874호)	- 금융 제재 강화 - 선박 검색 강화 - 무기 수출 금지
3차 핵실험 (2013. 2. 12)	23일 (안보리결의 2094호)	-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금지 - 선박 검색 의무화
4차 핵실험 (2016. 1. 6)	58일 (안보리결의 2270호)	- 광물수출 금지 (민생 목적 제외) - 쉘 화물 검색 의무화

< 국제사회 예상 대응 전망 >

구분	대응 전망
UN	- 김정은 위원장 제재 리스트 포함 - 북한 광물수출 금지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
미국	-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
일본	- 북한 국적자 입국 불허 검토
한국	- 미·일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중국	-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강조 - 북핵·사드 분리 접근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② 중국의 역할 전망

- (국제사회, 중국 역할 기대) 국제사회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제제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對북 압박 수단이 없어 제재 무용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
- (중국, 기존 입장 견지 전망) 중국은 북핵 불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체제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
  - **한반도 3원칙 고수** :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 견지
  -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달성 강조**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접근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을 주장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지도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對북 제재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강조
    - ※ 3원칙 중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근거
  - **한반도의 불안정성 관리** :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한반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바라지 않음
    -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동북아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서의 정치·외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의 제재와 압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
    - ※ 3원칙 중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근거
  - **향후 정책 방향** : 중국의 對북정책은 對미정책의 하위 변수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에도 미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 對북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향후 對북 채널을 지속 가동하면서 북핵 문제 협상의 중간자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임

### ③ 미국의 입장

#### ○ (美 대선 후보의 對北 정책 방향)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제재 및 강경책은 지속될 것임

-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 現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
  - 북핵 고도화, 북한 인권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 입장을 강조
  - 향후 클린턴의 對북정책은 한·미·일 3자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통한 對북 압박 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한편 북핵 문제 관련 '비군사적 해결'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란, 소극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정책임
- ※ 단, 최근 미 하원에서는 북한 금융기관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 또는 경제제재 동참을 직접 요구하는 등 이란식의 경제봉쇄를 시작, 클린턴 후보 당선 시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전망
-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 필요하다면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타격도 고려한다는 입장
  -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힘
  - 반면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정성있는 호응이 없을 경우, 직접 타격 또는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입장도 피력

#### ○ (향후 전망)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1~2년 간 미국의 對북 강경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美 대선주자들의 성향을 볼 때, 차기 美 행정부의 對북 정책은 최소 1~2년 동안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차기 美 행정부는 北핵 개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속 등을 이유로 對북 강경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 참고 > 북핵 일지

< 북핵 관련 주요 일지 >

일 시	주 요 내 용
1955. 3	북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
1956. 3	북한·소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1974. 3	북한, 원자력법 제정
1974. 9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한국, 1957.8 가입)
1985. 12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 *(한국, 1975.4 가입)
1991. 12. 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제3차 남북 핵협상)
1992. 1. 30	북한, IAEA와 안전 조치 협정 조인
1993. 2	IAEA, 북한에 특별 사찰 요구, 북한 거부
1993. 3. 12	북한, NPT 탈퇴 선언(1차 북핵 위기 발발)
1994. 10. 21	북미 제네바 합의(북한 핵 개발 동결에 대해 경수로 2기와 중유 제공)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2002. 1. 29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 북한·이란·이라크 '악의 축' 규정
2002. 10. 3~5	켈리 美 국무부 차관보 방북(북한 핵 개발 계획 징후 포착, 2차 북핵 위기 발발)
2002. 11. 15	KEDO, 對북 중유 공급 중단 합의
2002. 12. 22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기동 선언(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IAEA 사찰관 추방)
2003. 1. 10	북한, NPT 탈퇴 재선언
2003. 8. 27~29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3. 10. 2	북한,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2004. 2. 25~28	제2차 북핵 6자회담
2004. 6. 23~26	제3차 북핵 6자회담
2005. 2. 10	북한,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
2005. 5. 11	북한, 영변 흑연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 완료 발표
2005. 7. 26~ 8. 7	제4차 북핵 6자회담(8월에 휴회, 9월에 재개)
2005. 9. 13~19	제4차 북핵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채택
2005. 11. 9~12	제5차 북핵 6자회담 1단계 회의
2006. 7. 5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 7. 15	UN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 관련 활동 중단 촉구)

2006. 10. 9	북한, 제1차 핵실험 실시(플루토늄 방식, 인공지진 3.9 규모)
2006. 10. 15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對북 제재결의)
2006. 12. 18~22	제5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북한 先BDA 해결 주장으로 성과 없이 폐막)
2007. 2. 8~13	제5차 북핵 6자회담 3단계 회의, '2.13 공동 합의' 채택
2007. 7. 15	북한, 영변 원자로 폐쇄(2.13 합의 첫 단계 이행 조치로 북한에 중유 지원)
2007. 9. 27~30	제6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 '10.3 합의' 도출
2008. 6. 27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 10. 11	미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008. 12. 8~11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성과 없이 휴회
2009. 4. 5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2009. 4. 14	UN 안보리, 의장성명 공식 채택(북한 외무성,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2009. 5. 25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플루토늄 방식, 인공지진 4.5 규모)
2009. 6. 13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對북 제재결의) 북한 외무성, 플루토늄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1. 12. 17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2. 2. 29	북미 간 '2.29 합의' 도출(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및 미국의 對북 식량지원 등)
2012. 4. 11	북한 4차 노동당대표회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2012. 4. 13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2.29 합의 파기
2012. 12. 12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2호기 발사
2013. 1. 23	UN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북한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트리거 조항 포함)
2013. 2. 12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우라늄 방식 추정, 인공지진 5.0 규모)
2013. 3. 7	UN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對북 제재결의)
2013. 3. 3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핵·경제병진노선 채택
2013. 4. 2	북한,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6. 1. 6	북한, 4차 핵실험 실시(수소탄 주장, 인공지진 4.2 규모) 북한 조선중앙 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 3. 3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민수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 통제)
2016. 9. 9	북한, 5차 핵실험 실시(수소탄 주장, 인공지진 5.0 규모)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